



민주광장서 46주년 기념식 엄수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조영권 기자

## 李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위에 5·18 정신 당당히 새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최근 무산된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옛 전남도청 'K-민주주의' 성지 지원, 유공자 직권 등록까지 '세가지 다짐'을 약속하며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2·3·4·6·7·15면

### 제46주년 5·18

공법 단체장 요청에 '세가지 다짐' 화답  
“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 위해 최선  
옛 전남도청 'K-민주주의 성지' 지원 약속  
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 도입 발표  
5월 단체 “정치권 로드맵 수립을” 촉구

국가보훈부는 18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원형 복원된 옛 전남도청의 정식 개관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6년 만에 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각계각층 대표 등 약 3천명이 참석했다.  
개식 선언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다짐의 선언, 기념사, 기념공연, 특별공연,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거행됐다.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장들은 다짐의 선언에서 개헌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길 바라는 '오월의 염원'을 낭독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세가지 다짐'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자부심인 오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약속이었던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정식 개관한 옛 전남도청이 'K-민주주의'의 성지가 되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직계 가족이 없어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직권 등록 제도'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켜낸 분들이 단 한 명도 외롭게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7월1일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관련, 이 대통령은 “광주와 전남이 맞잡은 손이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이정표로 우뚝 서고 균형 발전이라는 희망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갈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5·18 정신을 충실하게 이어받아 광주가 그토록 절절하게 꿈꿨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오월 광주가 남긴 자유와 평등, 통합의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는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시를 연이어 낭독하는 기념공연 '오월의 기억'과 옛 전남도청 개관을 축하하는 특별공연 '오월 찬란'이 이어졌고 참석자 모두 '입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제46주년 기념식은 마무리됐다.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이날 이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호평을 이어가면서도,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등을 촉구했다.  
오월 공법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전향적인 약속들은 오월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왜곡과 폄훼로 고통받은 유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명예 회복과 위로가 될 것임을 확신

한다”면서도 “활용한 선언과 약속도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흔들림 없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만 완성할 수 있는 시대적 과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앞에 공포한 세가지 약속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로드맵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윤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보여주고 여야 협력을 요청한 부분은 의미가 있었지만, 더 강력한 로드맵이 아닌 원론적 수준의 표명이었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며 “제22대 후반 기 국회에서 반드시 개헌이 이뤄지도록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안재영·이연상 기자

Today	
국립 5·18 또 정쟁도구화 '비난' 쇄도	4면
6·3지방선거 격전지 '광주 동구청장'	5면
KIA, 홈 6연전 '상위권 도약' 분수령	16면

**OK! 지금은 전남시대**

남해안남중권 대표공항, 여수공항 ✈️

## 남해안 여행의 시작, 여수공항에서 편리하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026 WORLD ISLAND EXHIBITION  
YEosu KOREA  
**9.5.~11.4.**

✈️ **제주**  
매일 **4회** 운항

✈️ **김포**  
매일 **3회** 운항